

망언 3인방 징계, 한국당 연이은 꼼수에 무산 위기

5·18 3대 현안 어떻게 돼가나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과 모독을 종결시키기 위한 정치권의 노력이 여전히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25일 현재 5·18 관련 최대 현안은 ▲5·18 모독 망언 의원에 대한 징계 ▲진상규명조사위 구성 ▲5·18 왜곡 처벌법 통과 등이다. 하지만, 어느 것 하나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비협조로 이 같은 현안이 처리될 수 있을지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5·18 모독 논란 한국당 국회의원 3인에 대한 징계=우선 국회 차원의 징계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의원 징계 여부와 수위를 자문하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자문위)가 위원장직 등을 둘러싼 민주당과 한국당 추천 자문위원 간 갈등으로 멈춰섰기 때문이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는 사퇴 의사를 밝힌 한국당 추천 자문위원들에게 복귀를 압박하고 있으나 이들은 복귀를 거부하고 있다. 민주당 추천 자문위원장은 한국당 추천 자문위원이 불참하더라도 다음달 5일 무조건 회의를 열겠다는 입장이지만 또다른 갈등이 촉발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당 내 징계도 멈춰선 상황이다. 지난 4일 한국당 김영종 당 윤리위원장이 사퇴하면서 '5·18 망언' 의원에 대한 징계 논의가 계속 미뤄지고 있다. 한국당 지도부가 이 문제를 처리할 의지가 있다면 사의를 밝힌 김 윤리위원장을 설득해 나머지 징계 절차를 처리한 뒤 사표를 수리하거나, 사퇴하지 않은 윤리위원 중 위원장을 보임시켜 일을 진행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한국당 때문에 5·18 망언 파문을 일으킨 의원들에 대한 징계는 한 발짝 앞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5·18 진상규명위원회 구성 표류=한국당의 무

한국당 진상규명위원 채추천도 거부 왜곡처벌법 논의 한발짝도 못나가

책임한 태도는 5·18 진상규명위원회 구성까지 막고 있다. 지난해 9월 시행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이 1명, 여당이 4명, 야당이 4명의 조사위원을 각각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면 진상규명위원회가 구성되는데 한국당은 위원 추천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진상규명조사위 출범을 늦췄다. 더욱이 한국당은 특별법 시행 4개월여 만인 지난 1월14일 위원을 극장추천하면서 부적절한 인물을 선정해 청와대로부터 임명거부를 자초한 데 이어 채추천마저 거부했다. 한국당이 5·18 진상규명 마저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이이다.

◇'5·18 왜곡처벌법'=민주당·바른미래당·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 166명의 의원들이 지난달 22일 이른바 '5·18 왜곡 처벌법'으로 불리는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 날조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정의 조항도 신설했다.

여기에 평화당 장병완 의원(원내대표)도 최근 비슷한 내용의 '5·18민주공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 역시 4당의 공조 속에 발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평화당은 관련 법안을 선거법과 함께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공수처법을 놓고 대립하면서 관련 논의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 "특권층 불법행위 국민 분노 높아...공수처 설치 시급"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특권층의 불법적 행위와 위압에 의한 부실 수사, 권력의 비호 은폐 의혹 사건에 대한 국민 분노가 매우 높다"며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시급성이 다시 확인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말한 '국민 분노가 높은 사건'은 '버닝썬'과 경찰의 유착 의혹,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 고(故) 장자연 리스트 사건을 뜻한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8일 박상기 법무·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이들 세 사건을 보고받아서 "책임지고 의혹을 날같이 규명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들 세 사건 모두 사회 지도층이 연루됐거나 연관된 것으로 보이는 의혹이 있는 만큼 이를 연결 고리로 공수처 설치의 정당성과 시급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패스트트랙(신속지정안건 지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공수처 설치 조정안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은 "5·18 진상규명위원회 위원 추천도 조속히 마무리해달라"며 "정의로운 사회를 바라는 국민 요구를 수용해 정치권도 사회 개혁에 동참하는 모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민생법안의 신속한 국회 처리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여야 모두 3월 국회를 민생 국회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입법기관으로서 본분을 다하는 게 국민과 약속 지키는 일"이라며 "국민 생활과 국가 경제에 시급히 필요한 법안부터 신속히 처리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위한 법안 대표적"이라며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는 노·사·정이 긴 산고 끝에 양보·타협으로 합의한 매우 뜻깊은 사례로, 그 성과를 살리는 게 국회의 몫"이라고 언급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한전공대 실시협약 내달 중순께 체결

전남도·나주시 의회 의결 마치면

부지양도 방법·시기 등 조율만 남아

오는 4월 초 체결 예정이었던 한전 공대 실시협약이 관련 지자체의 의회 일정에 중하순으로 다소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전력 한전공대설립단은 25일 전남도와 나주시 등과는 부지제공 시기·방법, 지자체 재정지원 시기 등 세부적 내용 합의만 남겨둔 채 큰 틀의 협의를 마쳤으나, 재정 투입에 대한 지자체 의회 의결 여부가 중요한 요소로 남아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한전공대설립단은 4월 초 체결 예정이었던 실시협약 체결식은 4월 중하순께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와 나주시, 한전은 이달부터 집중적으로 논의를 거쳐 인프라 조성, 부지 인허가, 재정지원 규모 등 실시협약에 대한 큰 틀을 협의를 마쳤다. 다만 부지제공의 방법과 시기, 재정지원의 시기 등에 대한 이견이 일부 있어 이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

로 협의 중이다. 부지제공 방법·시기는 법·조례 개정 등이 일부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학교법인이 설립된 이후에 법인 명의로 부지를 양도받을 것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 총액 등 재정지원 규모는 합의됐으나, 지원 시기는 세부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전은 실시협약 체결식을 먼저 진행한 후 전남도의회와 나주시의회의 의회 승인 절차를 밟을 것을 고려했지만, 지자체 측에서 재정 투입에 대한 의회 승인이 먼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 일정이 미뤄지게 됐다. 전남도는 4월 초, 나주시는 4월 중하순께 의회가 열리는 점도 체결식이 늦어지는 이유 중 하나다.

지자체와 한전이 체결한 실시협약 내용은 오는 7월께 한전 최종 용역보고서 등과 함께 이사회 승인을 거치면 효력이 발효된다. 한전공대설립단 관계자는 "재정지원 규모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민감한 부분으로 지금 공개할 단계는 아니다"며 "의회 승인 절차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공개될 전망이다"고 밝혔다. /김지용 기자 dok2000@kwangju.co.kr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 선거제 패스트트랙 이전 재확인

홍영표·나경원 날선 말씨름

3월 국회 빈손으로 끝날 가능성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25일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추진하는 선거제 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지정안건 지정) 문제를 논의했으나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3월 임시국회가 주요 쟁점법안은 물론 민생법안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채 '빈손'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실에서 모여 선거제 패스트트랙 등 현안을 논의했다. 나 원내대표는 회동에서 선거제 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 추진에 반대하는 기존 입장을 고수

하며 홍 원내대표와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홍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싸울 땀 싸우더라도 민생 입법은 처리하자고 제안했다"며 "결론이 난 것은 없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선거법을 다시 논의해보자, 사법개혁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자세로 논의하자"고 했고, "패스트트랙에 태워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홍 원내대표와 나 원내대표 간 설전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패스트트랙에 올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법안을 놓고 대립 중인 민주당과 바른미래당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공수처 수사·기소권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바른미래당의 공수

처 설치 조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홍 원내대표가 공수처와 관련해)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기가 쉽지 않다는 원칙적인 얘기를 했다"며 "홍 원내대표가 바른미래당이 제안한 안을 최대한 수용해 사법개혁에서 논의하겠다고 하니가 최종적으로 진행 상황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제 패스트트랙 등을 놓고 여야 3당 교섭단체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릴 예정이었던 여야 원내대표 외한 회동은 취소됐다. 나 원내대표가 일정상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 추후에 다시 일정을 잡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침단 와이어스파크 검색

사행사 KOREA trust

위탁사 WCPINVESTMENT

시공사 중해건설

와이어스파크

점당 지식산업센터

맞춤형 사무실이 필요하다면,

광주 No.1

비즈니스타운

입주기업
세제지원

(광주연구개발특구)

중도금
무이자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2019년 12월 한시 적용)

전매제한
無

홍보관 OPEN

1668
3355

홍보관 광주광역시 서구 마록동 184-22
(광주아울렛 맞은편)

*상기 기재 사항이 모든 임대조건, 계약조건 등 상세 내용은 실제 임대 계약서 및 계약서 참조하십시오. *본 광고는 광고주에 의해 제공되는 정보이며, 본 광고는 광고주에 의해 제공되는 정보이며, 본 광고는 광고주에 의해 제공되는 정보입니다.